

엔데믹 휴가철 여행 급증하자 소비자 피해도 증가

목포에 사는 60대 승모씨는 지난 5월 튀르키예 일주 여행을 가려다 기본 나쁜 경험을 했다. 여행사를 통해 318만원을 결제했는데 출발을 5일 앞두고 어머니가 코로나에 걸려 계약 취소를 하려 했지만 업체와 연락이 닿지 않아 결국 가이드를 통해 여행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여행 당일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으며 여행비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레 추가로 50%의 배상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광주시 북구에 거주하는 60대 박모씨는 지난 3월 4일 여행을 통해 160여만원 짜리 베트남 나트랑 3박 5일 상품을 계약했다. 박씨는 출국 당시 공항 직원으로부터 여권이 훼손됐다는 안내를 받았고, 공항 직원은 여행사에도 출국은 가능하지만 베트남 입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불안했지만 여행사 직원이 "입국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해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결국 베트남 공항에서 여권문제로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코로나 확진으로 여행 취소하자 비용 환불 대신 배상금 50% 요구 소비자보호원 상담 2~3배 증가 피해구제 건수도 크게 늘어 소비자 불만 최소화 대책 필요

일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장이 문을 닫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순천에 거주하는 50대 정씨는 지난 2월 TV홈쇼핑을 통해 4월에 출발하는 베트남 5인 여행패키지를 구매했다. 1인당 59만9000원인 패키지상품으로, 정씨는 계약금으로 80만원을 선결제하고 4월 잔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출발 보름전 개인 일정이 생겨 취소를 요구했지만, 결제금액의 20%만 환급 받았다. 이에 정씨는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에 상담을 의뢰하게 됐다.

또 여행사를 통해 항공과 숙박 등 패키지 상품을 예약한 뒤 기상 악화나 현지 정세의 변화로 출발이 꺼려지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항공사나 해외 숙박업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다통의 소지가 많다.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하는 구제절차가 진행하는데 이러한 구제절차 건수도 증가세다.

광주지역 여행·숙박 피해 구제 건수는 2021년(1-

7월) 24건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 36건으로 늘었다. 전남에서도 같은 기간 구제건수가 2021년 12건이었지만 올해는 5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여행사 선택에 신중해야 하고 약관을 살펴 예약금 반환여부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권 발급 이후 여행상품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예약금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가 별도 청구되는 부분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소비자들을 위해 마련된 소비자 보호원 등의 기구를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설치한 상담 창구 등을 이용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또 다른 방법"이라며 "정부와 지자체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엔데믹 이후 그간 억눌렸던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여행·숙박 관련 광주·전남지역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피해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 광주호남지원 등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여행·숙박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484건(광주 232건·전남 252건)에 달했다.

지난해(1~7월) 광주 시민이 여행으로 겪은 불편 상담 건수는 34건에 그쳤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3배에 가까운 92건이 접수됐다. 전남 지역민도 1월부터 7월 사이 여행 불편을 상담한 건수가 36건(2021년)→45건(2022년)→82건(2023년)으로

증가했다.

숙박에 대한 불편상담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광주에서는 2020년 132건의 숙박불편 상담이 접수됐고 지난해 152건, 올해 140건으로 꾸준히 접수됐다. 전남 지역민들의 숙박불편 상담도 지난해 108건에서 올해 170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피해로는 예약 취소나 변경, 환불 등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꼽힌다. 또 위약금이 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거나 계약에 명시된

한쪽선 방사성 바로알기 토론회... 한쪽선 환경단체 반대 집회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주최하는 '방사선 바로알기 대토론회'가 27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왼쪽) 이에 광주전남환경단체는 토론회장 앞에서 피켓팅을 열고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이번 토론회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 없이 원자력 진흥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됐다며 대토론회가 아닌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광주 전라지역 방사선 바로알기 대토론회. (오른쪽) 이에 광주전남환경단체는 토론회장 앞에서 피켓팅을 열고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를 냈다. 단체는 이번 토론회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견을 가진 패널 없이 원자력 진흥 전문가들만으로 구성됐다며 대토론회가 아닌 원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배우 수지 기사에 '악플' 8년 만에 모욕죄 인정

가수 겸 배우 수지(29·본명 배수지)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인터넷 댓글을 단 누리꾼이 8년 만에 벌금 50만원을 내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10월~12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수지 관련 기사의 댓글란에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 '영화 폭망 퇴출 수지' 등이라고 쓴 혐의로 수지에게 고소당했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사회통념상 처벌할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다른 댓글은 처벌이 어렵지만 '국민호텔'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하는 것으로서 여성 연예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인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

하마터면 '묻지마 범죄'

서부경찰, 어깨 부딪힌 여성 찾아 흥기 들고 배회한 20대 구속

술집에서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둔기로 폭행하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2일 오전 6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한 데 이어 둔기로 추가 폭행까지 시도한 A(26)씨를 상해·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가던 중, 처음 보는 여성 손님 B씨와 어깨를 부딪혔다.

B씨는 A씨에게 허리를 숙이며 사과했으나,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의 얼굴을 손으로 한 차례 폭행해 코 부위에 부상을 입혔다.

B씨는 이후 A씨가 자리를 떠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A씨는 5분여 뒤, "분이 풀리지 않는다"며 유흥업소 밖에서 둔기를 구해와 B씨를 찾으려 술집 내부와 외부를 15여분동안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흥업소 인근 CCTV 등을 분석한 끝에 A씨를 검거해 2차 가해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해 27일 발부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분노조절장애를 비롯한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아 4개월여 전 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액 수입료 의혹' 양부남 구속영장 다시 반려

수사 무마 대가로 고액의 수입료를 받았다는 혐의로 양부남(62)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또 검찰에 가로막혔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성상욱 부장검사)는 27일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범죄혐의 및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검찰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년 11월 대구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진으로부터 도박공간개설 혐의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입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양 위원장의 주변 계좌를 추적해 전체 수입료 2억8000만원 가운데 약 9900만원이 양 위원장 사무실 법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월30일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혐의 등을 보강해 이달 2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반려됐다. /연합뉴스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